

도매시장 분쟁조정위 의무화 등 농업인 권익증진 나선다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분쟁조정 '민원도우미 제도' 도입 경쟁촉진·거래 투명성 강화 일환 '블라인드경매' 확대·의무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퇴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



설을 1주일 앞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쟁조정위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옴부즈만이 출하농업인의 불만·분쟁 상황에 대해 1차 대응과 권고 역할을 하고, 옴부즈만 권고 사항에 불복할 경우, 관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소재 등을 2차 판단·조정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치를 시범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경매'를 확대하고 의무

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경락가격과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와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거래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도 손본다. 평가 결과 공공성이 미흡한 법인은 퇴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재지정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법인

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재지정 요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을 위해 연내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산지에서 소비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확산,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부, 공짜야근·임금체불 등 감독 강화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5대 불법과 부조리행위 발표

올해부터 '공짜 야근'으로 악명높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정부의 기획감독이 강화된다. 조선업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관련 근로감독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5대 불법과 부조리행위로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으로 정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에도 기획감독을 이어간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아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야근이 잦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에 대한 임금체불도 기획감독 대상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나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한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감독 및 후속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집중지원

내달 24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2월24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22개사 안팎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신청유형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두 가지

가 있다.

'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스케일업' 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정도를 뽑는다.

선정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부과 '합당'

양사 과징금소송 등 청구 기각 법원, 공정위에 '승소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한 LG유플러스, KT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들을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

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 등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물 주문배송 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KT 같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망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L

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양사에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두고 LG유플러스와 KT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코트라 '글로벌 ESG+사업' 참가기업 모집

내달 13일까지 참가접수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ESG 활동을 지원해 국제적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이를 마중물로 해외 진출도 확장하는 '2023년 글로벌 ESG+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참가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하며 1차 사업 수행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다. 신청대상은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벤처기업, 유턴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물론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협회, 공공기관, 공기업이며, 국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이어야 한다.

참가 기업은 ▲자사 제품, 장비, 기자재를 기부하거나 ▲기술, 경영,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류장비를 이전 또는 기증할 경우, 제공한 기부 가치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또는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참가기업은 ESG활동을 통해 현지 수혜처 또는 정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자사 제품의 홍보를 통해 현지 시장진출의 발판을 구축할 수도 있다.

현지에서 ESG 행사 추진 시, KOTRA 해외무역을 통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장 및 차량 임차, 통역원 고용, 언론홍보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KOTRA는 올해부터 현지 수요 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수혜처와 기부희망제품리스트를 사전에 공지해 맞춤형 ESG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